

■ 책을 읽고 ■

*Chrétiens et Juifs sous Vichy(1940-1944):
sauvetage et désobéissance civile*

Limore Yagil, Paris: Cerf, 2005, 765pp.

박지현

유대인에 대한 차별과 억압 정책은 2차 대전 프랑스 비시정부(gouvernement de Vichy)가 나치 독일의 협력 정부였음을 드러내는 대표적 사례이다. 1941년 3월 23일 전국 유대인 문제 위원회(Commissariat général aux questions juives)가 조직된 이후, 그 해 5월 14일 프랑스 주재 외국 국적 유대인을 체포하였으며, 6월 2일 자유 지역(Zone libre)에서 유대인 조사법이 실행되었고, 8월 30일 점령 지역(Zone occupée)에서 유대인 대검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1942년 7월 16-17일 벨 디브 급습(Rafle du Vel' d'Hive) 사건으로 12,000명의 성인과 4,501명 아동이 체포되어 아우슈비츠(Auschwitz)로 보내졌다. 나치 독일의 협력 정부로서 비시정부는 반유대주의(antisémitisme) 정책을 표방하였고, 이에 따라 프랑스의 유대인 학살이 이루어졌다.

그런데 여기서 소개할 본 저서, 리모르 야질의 『비시정부 시기(1940-1944)의 그리스도교인과 유대인: 구조와 시민 불복종』(*Chrétiens et Juifs sous Vichy(1940-1944): sauvetage et désobéissance civile*)은 비시정부의 정책으로 희생된 유대인이 아니라, 프랑스인의 도움으로 구출된 유대인 생존자를 다루고 있다. 저자, 야질은 서문에서 “프랑스 유대인들이 어떻게 구출되었는가? 누구에 의해 어떤 이유로 구출되었는가?”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다. 프랑스 사회에서는 1930년부터 극단적인 반유대주의가 이루어졌고, 1940년부터 유대인의 차별과 억압 정책이 실행되었다. 그럼에도 비시정부 시기 동안 프랑스

유대인의 70%가 생존하였다. 이 정도는 다른 유럽 국가의 유대인과 비교했을 때 매우 높은 생존율이었고, 앞서 언급한 비시정부의 유대인 정책과 상반된 결과를 보여주는 비율이었다. 저자는 그 이유에 주목한다. 지금까지 기존 연구 성과가 프랑스 유대인의 체포와 억압을 주도하는 비시정부의 정책에만 집중되었지, 실상 프랑스 유대인의 생명을 구조하고 구출했던 전체 프랑스인의 태도에는 상대적으로 무관심했던 것은 아닌지 야질은 자문한다. 그녀는 유대인의 생명을 살린 프랑스인 개개인이 걸으로 드러내 놓고 의사 표현을 하지 못했더라도, 안으로 유대인 관련 법안을 거부했었다는 정황을 파악했다.

본문의 제2부(1~9장)에서는 구체적으로 누가, 어떻게 유대인을 구했는지를 보여준다. 구체적으로 저자는 1940년~1944년 나치의 프랑스 점령 지역 중 자유 지역(비시정부령)을 중점적으로 검토하였고, 그 외에도 점령 지역(나치 독일령-파리 포함 북부지역), 제한 지역(나치 독일령-동쪽 병합 지역 경계선), 금지 지역(나치 독일령-해안 지역)을 보충적으로 분석하였다. 주된 분석 대상은 비시정부의 법을 지켜야 하는 자유 지역이다. 분석의 인적 대상은 공무원, 경찰, 사회복지관련인, 종교인(가톨릭, 프로테스탄트교) 등이다. 특히 경찰관의 태도 분석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경찰관이 공적으로 유대인의 체포를 담당한 자였음에도, 개인적으로 유대인을 숨겨주고 구조해 주었다는 것이다. 그들 대부분은 비시정부의 권력을 인정했으나, 나치즘에 대한 반감을 넘어서 반독일 감정을 가졌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유대인 정책을 지지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저자는 나치 독일이 자유 지역을 점령한 이전(1942년 11월 말 이전)부터 자유 지역의 대다수 프랑스인이 유대인을 구조하려 했다는 사실에 주목한다. 기존 연구들을 살펴보면, 나치 독일이 자유 지역까지 완전히 프랑스를 점령하기 전까지는 대다수 프랑스인이 유대인의 문제에 대해 침묵하거나 무관심한 태도를 보였고, 오히려 유대인 체포에 협력하거나 무언의 지지를 보냈다. 그러나 야질은 프랑스 경찰사와 경찰의 개인적 태도 차이를 분석해서 기존 연구와 다른 결과를 보여준다. 프랑스 경찰서의 공식적 입장은 대부분 폐탕주의였지만, 경찰 개개인의 태도는 1940년부터 이미 유대인 정책에 반감을 품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이중적 태도가 유대인의 생명을 구하는데 쉽게

작용했다는 것이다. 저자는 그 이유를 두 가지 차원에서 설명하고 있다. 하나는 프랑스인에게 흐르는 그리스도교라는 종교적 토양으로, 다른 하나는 인간의 양심에 따른 개인적 선택으로 보았다. 그래서 가톨릭이나 프로테스탄트의 성직자와 신자 개개인, 그리고 인간의 양심에 따른 자유 지역의 프랑스인은 비시정부의 유대인 정책을 거부하고 유대인의 생명을 구조했다는 것이다. 저자는 비록 레지스탕스가 프랑스 유대인을 구했다는 역사적 관점이 중론이지만, 실상 프랑스 유대인의 70% 생존은 유대인 관련 법안에 불복종했던 개개인의 선택 때문에 가능했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

유대인의 차별과 억압을 주도했던 비시정부의 입장에서 벗어나 인간 본성의 문제로 귀착하는 역사적 시각은 상당히 신선하다. 정치사적 차원에서 벗어나 문화사적 차원에서 당시 프랑스인들이 가진 유대인에 대한 태도를 재조명해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정치사적 차원에서는 자유 지역이 비시정부의 영역 아래 있기 때문에 그 지역의 프랑스인은 유대인 관련 법안에 무관심하거나 찬성했다고 간주한다. 저자는 이를 비판하고 분석 대상의 개인별 사료를 계량화, 분석하여 유대인 관련 법안에 실제로 불복종한 프랑스인들의 존재를 부각하게 만든 것이다.

하지만 동시에 한계점도 분명하다. 프랑스 유대인 체포와 학살을 주도한 자들을 소수자로 한정시킨 결과, 프랑스 사회에 미친 비시정부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약화된 점이다. 즉, 결과적으로 유대인 학살에 대한 프랑스인의 책임이 축소될 수 있으며, 이미 무너진 “장밋빛 레지스탕스 신화”를 대신할 또 다른 신화를 만들 가능성이 열리기 때문이다. 프랑스 유대인에 대한 구출이 인간의 양심에 따라서 이루어진 프랑스인 대다수의 개인적 선택이라고 결론짓기에는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저자, 야질이 이스라엘 역사가이며, 이스라엘 국가와 유대인 지원금으로 유지되는 연구소의 전폭적 지지로 연구가 이루어졌다는 서문의 글을 보면, 프랑스와의 유대 관계를 피하려는 이스라엘의 정책과 맞물려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어쨌든 이 저서는 비시정부의 유대인 학살만이 아니라 그 이후 인종의 학살에 대한 프랑스인들의 태도까지도 생각해 볼 기회를 제공해 줄 것이다.

서강대 사학과, rosep@sogang.ac.kr